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일본정부의 신년 주요 경제정책

- 최근 새로 부임한 요사노 가오루 재무상은 고용확대를 통한 경제성장, 안정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디플레이션 종결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함.
 -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경제는 높은 실업률, 재정확장 정책의 효과 부진으로 인한 성장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는 고용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강구할 계획임.
 - 아울러 내수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물가상승을 유도함으로써 장기간 지속 중인 디플레이션 상황을 연내 종식시킬 수 있도록 통화정책 주무기관인 일본은행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.

-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부부채비율 악화와 관련해서는 신규 국채발행 규제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, 법인세 수입급감과 사회보장비용 증가로 올해 국가채무액이 1천조 엔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악화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.
 -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원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남발이 향후 장기금리 상승과 부채비율 증가와 맞물리며 대외 신인도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규 국채 발행액을 억제할 계획임.
 -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올해 국가채무액은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세 수입 급감,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증가, 신규 국채 발행으로 사상 최고치인 997조 7,098억 엔(국민 1인당 783만 엔 규모)에 달할 전망이어서 재정악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.
 - 또한 지난 27일 S&P가 정부의 부채비율 악화에 따른 재정적자 지속 가능성으로 8년 만에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(AA→AA-)시키는 등 정부채무 문제가 향후 일본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.

(로이터, 산케이신문 1/26)